

# “전남광주 통합특례, 국가 지원·후속 제도 갖춰야”

전남연구원, 산업·에너지 등 6대 분야 개선 과제 제시  
전력·용수 시설부터 광역교통까지 정부 재정 지원 강조  
권한 이양 범위·비용 부담 명확히...시행령·조례 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확보한 권한과 특례를 지역발전으로 연결하려면 국가 지원체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행령·조례 등 후속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남연구원은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분야별 주요 특례 및 개선 과제 I’을 주제로 한 JN1 정책연구를 통해 첨단산업 및

산업기반, 에너지, 농업·농촌, 해양수산, 공간, 교통 등 6대 분야의 정책 활용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전남의 산업단지·항만·전력 기반과 광주의 인공지능(AI)·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활성화 관련 122개 조문을 검토해 AI·반도체·미래모빌리티·이차전지 등 첨단산

업 육성과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국가기간 산업의 구조 전환을 주요 과제로 짚었다.

이를 뒷받침할 전력·용수 등 공통 기반 시설 구축과 특화단지 지정, 재정 지원에 관한 정부 협력체계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육성 특례가 실제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지려면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지원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에너지 분야 역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정책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전남광주의 발전용 신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은 2015년 약 2.60GW에서 2024년 약 7.67GW로 늘었다. 연구원은 전남의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광주의 AI·데이터센터·미

래모빌리티 등 전력수요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전허가와 전력계통, 분산에너지, 공공투자, 주민이익공유를 함께 설계하고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비용 부담과 보상기준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특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재정 기반이 과제로 짚혔다. 관련 23개 조문을 검토한 연구원은 농촌활력 촉진특구에 농산업과 전후방산업 육성 기능을 보완하고, 농업재해 지수보험을 국가 재보험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출 전문단지 조성·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책 유도 구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해양수산 분야는 수산업뿐 아니라 항만

·물류, 에너지, 관광 등에 흩어진 특례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과 해양용도구역,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상생, 바다연금,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등의 집행 기준을 시행령과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간정책에서는 국토계획·건축·도시개발·주택 관련 권한을 활용하되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발밀도 조정과 공공임대주택 운영, 역세권 개발,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등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인 만큼 개별 사업을 넘어 광역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행정통합 이후에도 기존 광역도로·광역철도의 법적 지위와 국가 지원체계를 유지하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시도 경계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지원 기반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신규 광역교통시설까지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광주권·서부권·동부권을 잇는 생활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도시권 범위를 재설정하고 광역버스 운행 특례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수요응답형 교통(DRT)과 통합교통서비스(MaaS)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 확대도 개선 과제로 짚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전남광주 순천시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 ‘제78회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며 헌화, 분향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 李 대통령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국정과제 추진”

순천시 합동추념식...대통령 명의 첫 추념사 발표  
민형배 시장 “드러나지 않은 희생자 찾겠다” 강조

여수·순천 10·19사건 78주기 합동추념식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추념사가 공식 발표됐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외면한 데 대한 성찰과 함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미신고 희생자를 직접 찾아 기록과 증언을 확보하고 유해의 가족 인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19일 순천 오천그린광장에서 희생자 유족과 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을 거행했다.

“78년의 기다림, 이제는 대한민국이 여순의 진실을 완성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형배 시장, 대통령실 경청통합 수석비서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합동추념식이다.

윤 장관은 이날 대통령 추념사를 대독했다. 지난해 제77주기에는 대통령이 사 회관계망서비스(SNS)로 추모 메시지를 전했지만, 합동추념식 현장에서 대통령 명의의 추념사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추념사에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오랫동안 외면해 왔다는 성찰이 담겼다.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착수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여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완성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국가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완성을 앞두고 통합특별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를 찾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민 시장은 추념사에서 “내년에는 국가 차원의 첫 진상조사보고서가 공개돼 78년 동안 묻혀 있던 진실이 대한민국의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아지 드러나지 않은 희생자를 먼저 찾아내서겠다”며 “남아 있는 기록과 증언을 찾아 모으고, 발굴된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념식에서는 긴 세월 이어진 유족의 고통과 진상규명에 대한 염원도 전

해졌다. 유족 박경진 씨는 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아버지 고 박찬길 검사의 사연을 소개하며 78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가족의 아픔을 이야기했다.

이어 제3회 여수·순천 10·19평화문화상 시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열여섯 살이 었다’가 낭독됐다. 창작음악극 ‘기억의 타살’과 순천시립합창단의 추모곡 합창도 이어졌다.

추념식은 4대 종교의례와 헌다·헌무 등 식전행사에 이어 묵념과 헌화·분향, 경과보고, 유족 대표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헌장을 찾지 못한 유족과 시민을 위한 온라인 추모관도 운영됐다.

통합특별시는 내년 4월 진상조사보고서 완성을 앞두고 미신고 희생자 발굴과 명예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모공간 조성과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희생자 애우와 유족의 일상 회복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이개호 “영광·함평 갯벌 치사율 높는데...구조장비 배정 소외”

전국 평균 2배...고위험 지형에도 재래식 장비 의존  
육로 우회 출동 시 최대 55분 소요... 골든타임 초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19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갯벌 사고 위험성과 치사율이 높은 영광·함평 지역이 첨단 구조장비 및 순찰 드론 배정에서 소외돼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갯벌 사고 및 장비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

지 전국에서 발생한 갯벌 사고는 총 342건(사망·실종 46명)으로 평균 치사율은 13.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광·함평 지역의 갯벌 사고는 총 9건(영광 8건, 함평 1건) 발생하여 2명이 사망·실종되며 치사율이 22.2%(영광군 단독 기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영광 백수·염산·법성과 함평 돌머리 등은 큰 조석간만의 차로 만조 시 성인 걸음



보다 빠르게 밀물이 차오르는 고위험 지형이지만 구조 현장에는 노후된 뱃배(2018년 도입) 등 재래식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

갯벌 구조의 핵심인 에어보트나 수륙양용차는 부재하며, 고성능 8륜 수륙양용 오토바이 역시 인천 1곳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연안순찰 드론 도입 사업 배치 대상에 목포해경 관내(영광·함평) 파출소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영광·함평 갯벌 지역은 저수심 지형

특성상 해상 직접 접근이 불가능해 육로로 우회 출동할 경우 최대 55분(31~51km 우회)이 소요되는 등 갯벌 사고 골든타임을 초과한다.

이개호 의원은 “영광·함평 갯벌은 큰 조차와 급속한 밀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음에도 첨단 구조장비 배정에서 소외돼 있다”며 “접근이 어려운 연안 위험구역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 추가 도입 및 첨단 장비 배치 시 영광·함평 파출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든타임 초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연안 안전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 지형에 특화된 출동 및 구조 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해양경찰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이 대통령 “전시작전권 신속히 환수”

춘추관 방문...“한미 협의도 돌려받는 쪽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500일을 기념해 춘추관에 들러 기자들과 오찬 및 간담회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이비어 브란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 같이 답했다.

일각에서 브란슨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나, 이 대통령은 애초 계획대로 전작권

을 조기에 가져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는 ‘환수’나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적 독립국가이며,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문화·군사적으로도 전작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미국이) 선의도 고마운 일이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지, 스스로 작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애초 계획대로 전작권

## 지방세 환급 지속...과세 신뢰도 도마

전남 지난해 착오 환급 2524건...광주보다 4.5배 많아

전남광주지역에서 행정기관의 과세 착오나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세 환급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에 따른 환급이 이어지면서 과세자료 관리와 불복청구 발생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남의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환급은 2524건으로 집계됐다. 환급액은 약 5억3000만원이다. 광주는 5558건, 약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광주보다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환급 건수와 금액이 많았고, 과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은 환급 규모도 컸다.

행정기관 착오 환급은 과세자료를 잘못 적용하거나 감면 대상에 세금을 부과하고, 동일한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전남은 광주보다 환급 건수가 약 4.5배, 환급액은 2배 정도 많았다.

올해 1~7월에도 전남의 행정기관

착오 환급은 1008건, 약 2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192건, 약 7800만원이었다. 연간 실적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도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환급이 발생하고 있다.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권리를 구제받은 환급 규모도 적지 않았다. 2025년 납세자 권리구제에 따른 환급액은 전남이 약 280억6000만원으로, 광주 약 74억5000만원보다 3.8배 가량 많았다. 환급 건수는 전남 7461건, 광주 579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7월에는 광주의 권리구제 환급액이 약 90억원으로 전남의 약 55억6000만원을 웃돌았다. 환급 건수는 광주 5243건, 전남 3910건이었다.

지역별로 연도와 기간에 따라 환급 규모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과세 처분의 적정성과 불복청구 사유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방세 환급 문제는 확대되는 추세다. 전국 지방세 환급액은 2022년 2조7771억원에서 2025년 4조4592억원으로 3년 새 61% 증가했다.

윤용성 기자 yon1404@

## ▶1면 ‘자원회수시설’서 계속

대상지에서 제외된 5곳은 개발제한구역(GB) 1·2등급지가 70% 이상 포함돼 보전가치가 높아 ‘임지로 부적절하다’는 자치구 의견을 반영했다. 이 중 2곳은 응모건 중 면적 또는 주민동의를 기준으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광역자원회수 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입지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 절차를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여 2030년 직매입 금지법 시행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하루 최대 650t까지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전남광주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입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